



경제의 틀을 바꾸면
미래가 달라집니다.

- 2015년 주요 업무계획 -

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

2015. 1. 13.



목 차



| | |
|---|----------|
| I . 2014년 평가 | 1 |
| II . 정책 여건 및 방향 | 2 |
| III . 핵심 실천과제 | 3 |
| 1.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. | 3 |
| 1-1. 크루즈 · 마리나,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. | 3 |
| 1-2.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. | 5 |
| 1-3.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. | 7 |
| 2. 수산업, 30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. | 8 |
| 2-1.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습니다. | 8 |
| 2-2. 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. .. | 11 |

I . 2014년 평가

1 주요 성과

□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

- 남극 장보고기지('14.2) 등 극지, 차세대 항법체계(e-Nav.), 新자산어보 (예타 중), 울산항 오일허브('14.8 1단계 완공) 등 선도 메가PJT 착수

* 확장적 거시정책에 부응,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: 47,050억원('14 대비 +7.4%)

□ 전통 해양수산업의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

- 톤세제 연장(→'19) · 해운보증기구 · 항만재생 등 해운항만의 새로운 발전 계기와 FTA에 대비한 수산물 수출 · 유통 · 가공 기반 마련

□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창조 · 서비스산업 육성

- 해양심층수 온도차 발전기술, 바이오플락 등 신개념 무환수(無換水) 양식시스템 및 로봇 기반 해파리 제거 등의 기술 확보
- 크루즈 관광객 100만명 돌파('13. 79만), 마리나서비스업 신설(법 개정) 등

2 미흡한 점

□ 해양수산 발전을 저해하는 후진적 요인 상존

- 예비 IUU어업국 상태 지속(지정 해제 움직임 시현), 선원 · 선박현대화 투자 저조 및 고령화 등 어촌 활력 회복에는 시일 소요

□ 정책 고도화와 현안 해결을 위한 뒷심 부족

- 북극항로 운항연기(용선료 부담) 및 부산항 수리조선소 등 핵심사업 지연

□ 세월호 등 연이은 해양사고로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 노출

-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· 감독 미흡 및 안전투자 여건 미숙

II. 정책 여건 및 방향

1 전통 해양수산업의 현 위치

- (해양산업) 경쟁항만 부상과 해운불황 장기화로 양적 성장은 한계에 직면하였고, 해상교통은 영세·노후화(해양서비스업은 태동 단계)
- (수산업) 자원 감소·고령화와 함께 폐쇄적인 산업구조(인력·자본 진입장벽)로 활력이 저하된 가운데 한·중 FTA 등으로 불확실성 고조

2 향후 정책 방향

- (해양산업) 소득 4만불 시대, 해양산업의 도약(퀀텀 리프) 실현
 - (서비스업 육성) 크루즈, 마리나 등을 집중 육성하여, 해운항만·물류 산업의 외연 확대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화 유도
 - (지역경제의 새로운 블루칩) 항만(배후단지)을 물류 중심에서 제조·해양新산업·문화·도심 기능 등이 집적된 융복합 산업단지로 리모델링
 - (해상교통 품격 제고)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수선사 진입을 촉진하고, 공공성을 강화(낙도·생활항로)하는 등 안전·서비스 투자 확대
- (수산업) FTA를 기회로 역이용하는 수출 산업화, 미래 세대를 위한 수산업·어촌 구조개선에 집중
 - (수출산업화) 디자인·브랜드 역량 강화로 수출 경쟁력 제고·해외 시장 다변화, 프리미엄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·종자 산업 육성 등
 - (구조개선) 양식 면허제도 전면개편 등 진입장벽 해소(인력·기술·자본), '명품어촌' 확산 등 지역별 6차산업화 특화모델 확립

Ⅲ. 핵심 실천과제

1 바다와 연안에서 경제혁신의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.

1. 크루즈·마리나, 미래 해양산업의 아이콘으로 육성하겠습니다.

① 관광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동력, 크루즈

-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 * 크루즈법 제정 후속 조치
 -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,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* 및 해외 마케팅·전문인력(100여명) 양성 지원
 - * 취항 시 관광진흥기금 대여, 선상카지노 허가, 외국인 종사자 복수비자 발급 등 지원
- 국내 항만을 母港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 유치
 - * (모항 이용) 숙박 등 부대수입 발생, 연간 약 900억원 vs. (단순 기항) 연간 약 427억원
 - (유치활동 강화) 기항지(寄港地)의 자연·문화, 지리적 이점 등을 활용한 관광컨텐츠·프로그램 개발(지자체 협업)
 - * 예시) 제주권 : 무비자 입국(120시간)·고유의 관광자산 활용, 강원권 : 동해·속초항 등에 중국 크루즈선 기항 유치('15.9)
 - (마케팅) 제주 국제크루즈포럼('15.8), 민관 합동 유치설명회('15.3) 및 한-중-일 공동 크루즈상품 개발 등 해운협력 강화
- 크루즈선 기항 인프라 지속 확충
 - 부산북항('15.7) 등 전용부두 10개 선석*을 확충(~'20)
 - * <운영 중> 부산 동삼동(8만), 여수신항(15만), 제주항(8만), <개발 중> 부산북항(10만), 인천항(15만, '17), 서귀포항(15만x2, '16), <계획> 목포항(3만), 속초항(3만), 제주항(10만)

②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균형성장하는 마리나산업

○ 서비스업 신설 및 활성화 * '14.12월 마리나법 개정

- 선박 대여·보관·계류업 신설, 선박·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등 서비스업 발전기반* 조성('15.上,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)

* (선박 이용자·대여업자) 저렴한 이용, (선박 소유자) 관리비용 절감, (사업·투자자) 투자금 확보 용이, 리조트 등 복합 마리나 개발 가능

○ 민간투자 촉진(규제·제도 개선)

- 민간 마리나항만에 대한 점·사용료 감면비율 확대(현 50%→100%,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)하고,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('15.上)

※ 부산북항 해외 마리나 사업자 유치(싱가폴 SUTL社와 실시협약, '15.上)

-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수는 2→1개로 완화('15.下, 마리나법 개정)하고, 마리나산업시설 조성절차 합리화(국토부 협의)

- 거점형 마리나항만('15.上, 민자) 개발 촉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기 지정 6개소*를 포함한 대상지 선택 자율권 부여('14.12~'15.5, 사업공모)

* 인천 덕적도, 군산 고군산, 여수 엑스포, 창원 명동, 울주 진하, 울진 후포

○ 레저선박 제조산업 등 육성 * 등록 선박 : 11,359척, 제조업체 : 59개

- (세제) 국산 레저선박 구매수요 확대를 위해 관련 지방세 중과 기준을 1억원→3억원으로 상향 추진(행자부 협의 중)

* (1억원 이상) 취득세 10.02%, 재산세 5% 등 중과세, (1억원 미만) 2.02%, 재산세 0.3%

< 문 제 점 >

· 新造 거래가격이 4억원인 외국산 모터보트(10m이상)는 건조 5년 후 수입·판매 시 시가표준액이 약 9,100만원으로 평가되어 중과세 회피 가능

- (수출) 수출용 제조기업 식별코드를 레저선박에도 발급('15.上)

- (국산화) 메가요트 기술개발('15~'19, 210억원)에 착수하고, 중소 레저선박 제조업체의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

2. 해양공간을 경제활성화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.

① 항만배후단지* : 돈과 사람이 모이는 지역경제 중심으로 리모델링

* ('14.12 기준) ①임대분양률 81%(여의도 면적의 2.1배인 6,041천㎡ 공급, 4,935천㎡ 임대), ②외국인 직접투자 1,083억원, 영업가동률 78.8%(132개 유치기업 중 104개), ③일자리 4,228개('13~'14)

○ (개발방식) 기존 정부개발·민간임대방식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·분양도 허용하여 글로벌 기업 유치 촉진(1종 배후단지)

○ (도심기능 강화) 상업·주거·업무용 시설 설치 허용(2종 배후단지)

* (1종 배후단지) 물류 기능, 임대개발, (2종 배후단지) 도시 기능, 분양 가능

○ (제조업 차별 해소*) 입주기업 선정 평가제도와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·보완하여 물류기업과 동등한 입주환경 조성('15.1 시행)

* 입주예정 기업 37개 중 50% 이상 영업 시 일자리 560여개 창출 예상('15)

○ (마케팅) 항만별 Biz모델*을 개발하여,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

* (부산항) 일본 물류·화학기업 중점 공략, (광양항) 화학·제철 등 배후산업 연계 기업 마케팅, (인천항) 對중국 및 수도권 화물 중심 물류기지

< 실제 투자사례 : 부산신항 배후단지 日 기업 >

①MS Distripark('09.2 입주, '13년 매출 132억원, 당기 순이익 20억원, 고용 80명),

②미쓰이소코코리아, ③THE NICE KOREA('14.6 입주, 각각 6백만불 투자)

○ (세제 등) 자유무역지역(FTZ)을 확대 운영하고, FTZ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추진(외투기업 : 법인·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)

② 연안에서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

○ 바다 그린벨트(수산자원보호구역*) 이용 제한 완화

* 21개 시·군 10개 灣 3,230km²(서울시의 5.3배-육지 368, 해역 2,526, 내수면 336)

- (보호구역 축소) '17년까지 육지부(368km²)의 30% 해제*('15.6 고시 개정)

* ①육상오염원 차단이 가능한 지역 대상, ②기후변화 등 산란·서식장 변화를 고려한 보호구역 재조정과 연계 추진

- (문화·경제활동 지원) 관광객·주민 편의시설* 설치('15. 시행)와 일정면적 이하의 음식점·생활형 숙박업 허용 검토('15.6)

* 숙박·오락시설·유흥집 외 복지·문화·환경정비·레저용 기반 시설 포함

- (소형조선 활성화) 낚시·레저선 수요 증가를 감안 건조·수리 가능 어선 규모·대상을 각각 24m→40m 미만, 어선→일반선박으로 확대('15. 시행)

○ 무인도서*의 개발·이용 활성화

* 전체 2,876개 중 2,421개 관리유형 지정 : ①개발가능 224(9%), ②이용가능 1,165(48%), ③준보전 554(23%), ④절대보전 150(6%) 분류 ⇒ 민간 소유 1,270개(44%)

- 개발여건이 양호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도서(민간 소유)는 관리유형을 변경(준보전·이용가능→개발가능)하여 개발 촉진*

* (지원 내용) 도로, 항만 등 공공시설 지원,
(투자 추진 사례) ①인천 소어평도 콘도, ②하동 솔섬 청소년수련관

- 개발계획서 제출 면제기준 면적을 33㎡→100㎡ 미만*, 농림어업용 시설(비닐하우스) 설치기준은 250㎡→500㎡미만으로 완화('15. 시행)

* 귀어·귀농자에 대한 주택 신축융자 지원 가능 면적인 100㎡ 적용

○ 공유수면 이용절차 간소화

- (공유수면) 준공검사 이전 여건 변화 등으로 일부 구간을 먼저 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우선사용 허용(공유수면관리법 개정, '15.下)

* 점·사용 위치, 목적, 기간, 사용료 등 이용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현황 서비스 제공('15.下)

- (해역이용협의) 서류작성·협의·사후관리 등 소요절차 일체를 전산화하여 기간 단축(30일→20일) 등 추진('15.12)

* 해역이용협의 건수 : ('08) 1,421건 → ('10) 1,854 → ('12) 2,150 → ('13) 2,180

3. 해양교통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.

① 연안운송업 경쟁체제 및 수익구조 확립

- (면허제 개편) 그간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수송수요 기준을 폐지하고 면허 사전공모제*를 도입하여 민간 경쟁기반 마련

* 신규면허 발급 시, 기존 先신청자 발급방식 대신 사업자 공모 및 평가를 통해 항로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한 사업자에게 면허 발급

- 수송수요 기준 폐지와 함께 자본금 기준 신설, 안전기준 강화(해운법 개정) 등을 통해 선사 대형화*, 컨소시엄 구성 등 유도

* 안전책임자 채용 의무화, 예비원 확보의무 강화 등에 따라 소규모 선사 운영 한계

- (운임체계 개편) 하계 등 수요폭증 시 혼잡비용을 반영하는 탄력 운임제, 유가변동을 반영하는 유류할증제 등 도입

② 섬·연안 주민 공공서비스 강화

- (낙도 보조항로) 비영리법인, 대형선사 등에 의한 통합운영 검토

- (도서민 생활항로) 지자체·비영리법인 진입 유도(면허시 가점)

* 예시) 목포 지역 4개 항로, 4개 농협에 부여된 한정면허→일반면허로 전환

③ 여객선 현대화 촉진

- (신조 촉진)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여객선의 신조 활성화를 위한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 등 검토('15.上, 관계부처 협의)

* 현대화 사업규모 대폭 확대(500억원→1,250), 상환기간 연장(8년→10) 등 지원조건 개선('15.1)

- (중소조선업 상생) 산업부의 중소 조선업 육성과 연계·협업으로 여객선 신조 수요와 공급계획 등이 포함된 5개년계획 수립('15.12)

1. 수출에서 수산업의 미래를 찾겠습니다.

① 수산업, 디자인과 브랜드를 입고 세계로

○ 청년 창업과 연계한 디자인 역량 강화

- (1단계) 대학생 · 창업 동아리 · 중소 디자인회사 등을 대상으로 공모전*을 개최하여 다양한 디자인과 아이디어 발굴('15.上)


* G마켓, 옥션 등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 개최하고, 추후 수산 기자재 · 용품 등으로 대상 확대

- (2단계) 수산물 디자인BANK*를 구축('15.上)하고, 어업법인 ·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 · 창업자가 활용토록 제공('15.下)


* 수산 관련 전문 · 대형 쇼핑몰에서 운용 → 추후 일정부분 유료화 등을 통해 디자인 관련 창업 · 중소기업 지원 등에 활용

- (3단계) 수산 관련 창업 희망 · 준비자, 지역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· 창업 희망자와 1:1 디자인 멘토링 지원('16)

○ 통합 브랜드 개발

- (수출용) K-Fish 등을 확정('15.1)하고, 홍보 콘텐츠(CF 등) 제작, 해외 기획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(36억원)

· 통합 브랜드를 활용하여 거대(美, 中, ASEAN 등) · 신규 시장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· aT지사 · 수협 수출지원센터 등 협업 강화

- (내수용) 어식백세를 主브랜드로 소비촉진 활동 강화*

* 대형 식품업체와 협업 : 현대그린푸드, 웰스토리, 신세계푸드, 동원홈푸드, 아워홈 등과 협력 MOU 추진('15.上)

○ 아시아 3大 수산박람회 육성 : 국산 명품브랜드 배출의 요람

- (1단계) 국내 박람회* 통합·규모화('15)→(2단계) 아시아권 핵심박람회(동경, 청도, 방콕)와 네트워크 강화('15~'16)→(3단계)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 개최('16)

* 서울수산식품전시회, 부산국제수산물무역박람회, 지역축제 등

② 수출시장 다변화

○ 한·중 FTA를 계기로 중국 프리미엄 시장 선점

- 초저온 냉동창고(청도 '14.11 완공)를 본격 운영하여 참치 등 고품질·고가 제품 직수출

* 對中 참치수출 : ('09) 8,450천불 → ('11) 16,433천불 → ('13) 19,750천불

- 수출지원센터('14. 상해, '15. 청도)·aT 해외지사 등을 거점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중국 내륙 유통망 확보 지원

○ 신규시장 개척으로 對日 의존도(37%) 완화 * '14. 138개국

- 앵커숍*(6개국·95품목)을 운영하여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, 수출 전략 수립·시장 조사를 위해 「해외시장 분석센터」 운영('15.3, KMI)

* ('14. 5개소·81품목) 中 우한, 대만 타이중, 브라질 상파울루, 체코 프라하, 폴란드 바르샤바 → ('15) 중국, 대만, 브라질, 체코, 폴란드, 이탈리아(신규)

③ 수출 가공·종자산업 육성

* 수산 가공품 수출 비중 : 30.3%('13년 수출액 21.5억불 중 6.5억불)

○ 가공 인프라 확충

- (產地) 유통기능이 결합된 처리저장시설(4개소) 조성, 공동가공시설 현대화(7개소) 등 생산단계에서부터 가공하여 고부가가치화

* (산지처리저장시설) 경기 평택, 전남 장흥, 경북 포항, 제주

(공동가공시설) 강원 속초·고성, 경북 울진, 전남 장흥·강진·영광, 경기 평택

- (소비지) 도매시장 등을 가공·전시·관광의 복합공간化

*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('15.8),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('15~'18), 자갈치 시장 해양수산 복합 전시문화공간('14~'17), 대구 소비지분산물류센터('16)

※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(롯데) : 관광상품화, 유통·판로 확보 지원

○ 식품가공 관련산업 육성

- 천일염의 이용범위 확대(의약품·음료 등)·해외진출 맞춤형 상품 개발, 젓갈 명품화 등 전통식품산업 활성화

* (천일염)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요오드 첨가 가공염 개발('15.12)
(젓 갈) 명품화를 위한 저염 상품·브랜드 개발 등 육성계획 수립('15.11)

- 가구구조 변화(1·2인 가구 증가),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간편·편이 식품·건강기능성* 등 新수인가공식품 연구·개발 본격화(22억원)

* 신물질 추출기술을 이용한 후코이단(미역), 항산화영양제(스피루리나) 등

4 우량종자 개발

○ 수출 전략품목 종자 개발

- 10대 품목의 생산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종자를 개발(169억원)하고, 우량종자의 신속 보급을 위한 신품종보급센터 확충(넙치→전복)

* 종자업계의 계획생산·수급조절을 위한 수산종자관측사업(김, 전복, 넙치) 실시 및 산업현장 기술·경영 클리닉 시범사업 추진

< 10대 수출 전략품목의 맞춤형 육성 방안 >

| 전 략 | 품 목 | 지원 방안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산업화 | 넙치, 전복, 해조류 | 생산·가공·수출 산업화 지원 |
| 단기 집중육성 | 해삼, 민물장어 | 종자개발, 양식기술 개발 집중 |
| 중장기 기반마련 | 다랑어, 갯벌참굴, 관상어 | 제도 정비, 양식기술 개발 |
| 현지 생산 | 능성어, 새우 | 해외어장 개발 |

○ 종자수출 지원(Golden Seed Project)

- 넙치, 전복, 바리과, 김 등 고부가가치 수출종자 개발 지속 추진(80억원)

2. 代를 잇는 젊은 수산업으로 구조를 개혁하겠습니다.

① 진입장벽 완화

○ 50년 만의 양식 면허제도 개편(양식산업발전법 제정)

- 양식업 규모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과 외부자본이 참여*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기준을 완화

* 대상품목(안) : 참다랑어, 연어류(바다송어), 능성어, 비식용 해조류 등

- 심사·평가를 거쳐 유희·부실 어장은 재면허 제한

○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

- 귀어·귀촌인의 안정적 정착('10. 65명→'14.10. 134)을 위해 어촌계 가입 요건을 지구별수협 조합원→일반 어업인*으로 확대·개방('15.下)

* 연간 어업경영 판매액 120만원 이상, 연중 60일 이상 어업종사자 등

- 창업·주택자금 지원 대상을 양식·어업→유통·가공·레저로 확대

② 어촌경제 구조 개편

○ 어촌 혁신사례의 전국 확산(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)

- 성공사례를 Biz모델화하여 확산시키는 등 모델별 “명품어촌” 선정
- 1차적으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어촌체험 마을(106개소)은 등급제를 시행하여 운영 내실화

* '14~'15년 간 마을당 5억원 지원 : ①태안 중장 5리, ②해남 송호·중리, ③거제 해금강, ④여수시 안포, ⑤양양 남애(바닷속체험마을)

-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6차 산업화 모델* 정착

* 예시) (신상품 개발형) 어촌 고유자원(관광, 문화, 수산 등)+R&D=신상품·서비스, (저이용·폐자원 활용형) 유희 어촌자원+R&D=자원 이용도 제고, (판로 다각화형) 어촌 생산·제조품+자본투자=판로 개척·다각화, (복합형) 모델간 융합

○ 어촌·어항시설 고도화 및 부가기능 활성화

- 어항 정비·개발을 위해 재정 16백억원 투자('15)

* 방파제·물양장 등 개발·정비(14백억원), 다기능어항·어항고도화·미항 (2백억원)

- 국가어항 유희부지 수역 내 부잔교·신재생 에너지(태양광, 풍력 등) 시설 설치 등 민자사업 발굴·유치

* 대상사업 선정·타당성 분석('15.1~9)→사업 확정('15.12)→사업 추진('16)

< 민자개발 추진 사례(협의 중) >

①부잔교 설치(H社 등 41개항 약 600억원, '15.12~'18),

②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(S社 등 4개 기업 전남 계마항, 약 60억원, '15.6~'18)

- 어촌관광구역 내 민간 조성 휴게시설(숙박·오락·목욕 등)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되는 규제를 폐지('15. 시행)하여 투자 촉진

○ 어촌 복지망 확충

- 영세·창업 어가를 위한 營漁도우미·후견인 제도 시행(520 어가)

-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*(18개→21개)하고, 시범사업 일부 품목을 본사업으로 편입**(5개→9개)

* 신규(3) : 가리비, 송어, 톳 / ** 본사업(4, 잠정) : 돌돔, 감성돔, 농어, 쥐치

-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확대(5톤 이상→4톤)를 위한 법적 근거*를 마련하고, 재해어선원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 활성화('15.10)

*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('15.6)

- 낙도어촌 원격의료('15.上, 원양어선 시범사업) 추진(복지부 협업)

경제혁신과 30년의 성장,
“바다의 힘”으로 일구어 내겠습니다.